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5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기자회견문

스포츠윤리센터는 반복되는 성희롱, 직장갑질, 2차 가해
주범인 울산동구체육회 최해봉 회장 제명징계 하라!

20201014

철인3종선수사망사건공동대책위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승인을 취소하고
이기흥회장은 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

20201014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1. 국정감사 대한체육회-KOC 분리 및 올림픽 준비사항 등 질의
2. 체육회, 도쿄올림픽 방사능 대책 마련 미흡...원안위와 메일 한 차례 그쳐
3. 정유라, 조재범이 체육인명사전에? 이기흥 회장 “아직 확정 아냐”
4. 대한체육회, 문체부 감사 결과 무시... “사유화 우려”



[기자회견문]

스포츠윤리센터는 반복되는 성희롱, 직장갑질, 2차 가해 주범인 울산동구체육회 최해봉 회장 제명징계 하라!

2019년 1월, 조재범의 상습적 성폭력과 2020년 고 최숙현선수의 죽음으로 체육계의 성폭력과 괴롭힘,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최선수의 사망은 대한체육회 내 존재하는 피해구제기구가 아무런 기능을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스포츠혁신위의 조사에서도 대한체육회내 클린스포츠센터 등은 제 식구 감싸기로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 이번 대한체육회 산하 울산시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직장갑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반복됐다. 고용노동부에서도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최해봉체육회장은 심각한 성추행과 갑질을 저질렀음에도, 울산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제명처리가 아닌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오히려 성추행 고소와 징계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건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이관됐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이관된 울산동구체육회장 징계요구는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제대로 된 조사가 안되고 있다. 신고자의 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가 신고자에 대한 익명보장과 생명 신체에 위협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말이 수사에 그칠지는 이번 울산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정부기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대한체육회, 울산시 체육회를 더 이상 감싸지 말고 피해자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2차 가해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울산동구체육회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 제명이 필요하다. 아니, 꼭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의 변화는 인적 혁신이 없이 불가능함을 울산동구체육회장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수들과 직원들이 성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며 떠나는 금메달은 의미 없다. 그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진짜 독립적인 조사와 판결을 하는 기관인지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빠른 사건조사와 조치임을 명심하고 빠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성희롱, 직장갑질, 2차가해 주범
울산동구체육회장 제명징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승인을 취소하고 이기흥회장은 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개정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정관개정으로 현 이기흥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대한체육회장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될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스포츠혁신을 간절히 바라던 스포츠인과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관리감독 권한조차 상실하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게 무릎을 꿇은 형국이다. 정관승인 결정을 미루면서 제대로 KOC 분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IOC를 뒷배로 한 대한체육회 꼼수 주장에 시종일관 끌려 다녔다. 철인3종 사건 특별조사단 결과발표를 통해 체육국장을 경질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은 관철시키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치욕이다.

대한민국 체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는 시작부터 반칙과 꼼수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현직 회장은 차기회장 선거에서 적어도 석 달 전에는 물러나 정정당당히 경쟁하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너진 것이다. 지난 9월초 이기흥 회장은 정관승인을 늦추면 IOC 위원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번 정관개정이 다른 종목단체의 수장들 선거에도 적용됨을 스스로 밝혔다. 문체부 승인이 늦어져 현재 대한핸드볼협회장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핸드볼 회장이 사임과 재신임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조항은 재벌총수도 지키던 최소한의 장치였다. 번거로움과 공정성을 맞바꾸자는 건가? 무능력한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체육계 수장에 이 정도의 민주주의 인식수준을 가진 자가 차기회장을 노리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의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IOC 국장의 편지를 빌미로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KOC 분리 시도를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호도했다. 결국 KOC 분리반대가 연임을 위한 포석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체육계 비리와 파행의 주인공이다. 특히 2019년 초 조재범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뼈를 깎는 쇠신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불과 넉 달 전 고 최속현 선수가 세상을 등지는 비극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심지어 두 번의 실패로 이미 자격미달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사퇴요구에 '별개의 사안'이라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국회 청문회에서 했다. 더 이상 무책임과 무능의 끝판왕인 현 이기흥 회장에게 대한민국 체육계 수장자리를 맡길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체육계 개혁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을 취소하라!
이기흥 회장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KOC 분리요구에 성실히 답하라!

2020년 10월 14일

철인3종선수사망사건공동대책위/문화연대/스포츠인권연구소/인권과스포츠/체육시민연대



국정감사 대한체육회-KOC 분리 및 올림픽 준비사항 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문체위는 15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 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체육회와 KOC 분리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앞으로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 외교에 집중하도록 KOC와 체육회를 분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회장에게 질의했다. 이기흥 회장은 "올림픽 유치와 KOC 분리는 별개 사안"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체육회는 전체 예산의 96%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공공기관이다. 준정부 기관에 준하는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체육회와 KOC 분리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방침을 두둔했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인 스스로 KOC 분리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재 시중의 관심은 체육회장 선거와 KOC 분리에 있다. 체육계의 정치화가 체육 정신을 망가뜨리고 체육계를 분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체육회와 KOC 분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IOC 헌장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IOC가 완벽한 스포츠의 독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한체육회, 즉 NOC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먼저다. 정부의 분리 추진은 NOC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체육회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대한민국 선수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보고서의 취지가 선수 보호를 위한 연구가 아닌 체육회 위기관리 연구로 중간에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이기흥 회장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안했다. 이용 의원은 철인3종 유망주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징계를 받은 철인3종연맹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의신청 등으로 실제로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며 문체위 차원의 정부 감사를 요구했다.



체육회, 도쿄올림픽 방사능 대책 마련 미흡... 원안위와 메일 한 차례 그쳐

대한체육회가 2020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방사능 피해 우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5일 체육회와 원자력안전위(원안위)가 도쿄올림픽 방사능 대책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월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선수단 위기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용역기관을 통해 원안위에 자문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 원안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원안위가 말하는 '공시 자료'는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말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야구개막전이 열릴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과 미야기 경기장 주변의 환경방사선 검사 결과는 국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문제는 체육회가 원안위와 주고 받은 안전 대책 관련 논의가 이것으로 끝이라는 점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어디서든 환경부나 원안위에 방사능 안전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나 검증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가 "자칫 자체 검사로 안전성을 문제 삼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우리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외교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체육회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독립기관에 의뢰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쿄 올림픽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7월로 1년 연기됐다.

kimheeseon@joongang.co.kr



노컷뉴스 박세웅 기자 2020.10.15

정유라, 조재범이 체육인명사전에? 이기흥 회장 “아직 확정 아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연말에 발간할 예정인 대한민국 체육인명사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와 지도자, 과거 친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2월 빙상계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과 올해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 체육회는 가해자들이 체육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해자인 조재범과 장윤정 모두 인명사전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의 왕기춘과 입시 비리로 모두가 잘 아는 정유라 등 영구제명을 받은 선수들도 등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체육인명사전은 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인물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제작된다.

도종환 위원장에 따르면 기념사업회가 선정한 9000명 이상의 체육계 인명사전에는 친일 인사 34명, 성폭력과 폭력 및 품위훼손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와 지도자 240명이 포함됐다.

도종환 위원장은 "친일 인사들이 훌륭한 삶을 산 체육인들과 같이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선수들은 성적 위주로 정리하고 있고 체육 행정가도 각 분야별로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shen@cbs.co.kr



[2020국감] 대한체육회, 문체부 감사 결과 무시... “사유화 우려”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현 회장의 대한체육회 사유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IOC가 승인한 자체 정관까지 어기며 이사회를 편법으로 구성한 것은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체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6조 제4항에는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40대 이사회 49명 중 8명인 16%만 올림픽종목 경기단체 대표자로 구성돼있어 정관 제26조 제4항과 제5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시,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돼야 하나, 대표성을 인정받는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직 임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 것은 잘못이며, 향후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회원종목단체 현직 회장이 아닌 사람을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2018년 문체부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2019년 10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를 단 1명만 임명했다. 그 결과 현재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는 총 49명 중 8명으로 재적이사의 16.3%에 불과하며, 이는 문체부 감사 당시 18%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박정 의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가 과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체육회가 직접 정한 룰”이라며 “체육인이 룰을 어긴다는 것은 스포츠 정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이사 보선 또는 새로운 집행부 임원 구성 시 해당 정관에 맞게 임원 구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개인이 아닌 체육인 모두의 것이고, 정해진 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임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